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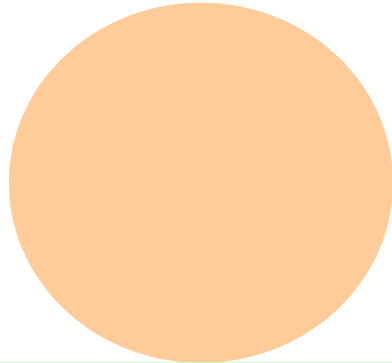
주간 이슈 리포트

69 호

2005년 1월 넷째주(1/24 ~ 29)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거드름과 사대주의 |
| - 노동자 세상: | 민주노동당 “서민생활위해 1조 2천억 풀어야” |
| - 통신정책: | ‘휴대인터넷 선도국’의 조건 |
| - 정자동 6층에서 | 민주노총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보고 |
| - 만화방 | 시사 만화 |



거드름과 사대주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라는 말이 있다. 국내에서는 영치없이 굴던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사람으로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다. 좀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욕먹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럴지도 않는가 보다. 성매매를 금지하자 동남아 섹스관광을 즐기고 있다한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을 마치 하인 다루듯 막 대한다고 한다.

얼마전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노말 유기핵산에 중독돼 하반신 마비 증세가 발생했다 한다. 이미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들이다. 또한 많은 외국인 산재환자들이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게만 보이는 졸렬한 의식이 숨겨져 있다. 노동자인 우리가 새겨야 할 가슴아픈 이면이다.

미디어 오늘에 실린 언론인 정경희씨의 칼럼을 게재한다.

근대과학을 완성했다는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1642-1727)은 링컨셔의 콜스터 워드라는 마을의 작은 농가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는 평소 인심이 후해서 선물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고, 젊은 사람이나 고향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런던에 사는 링컨셔 사람들이 해마다 벌이는 잔치에 참석하기를 즐겼다. 그는 최초의 근대적 과학자이자 마지막 마술사라고 한다. 천재과학자이면서 연금술(鍊金術)에 심취했고, 우주를 꿰뚫어 보는 정밀과학자이면서 고향사람을 좋아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뉴턴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다. 제작년인 2003년 10월 고려대 재학생 244명에게 “한국·미국 2중국적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한다.

이 질문에 대해 44.8%가 미국을, 55.2%가 한국을 택하겠다고 답했다한다(고대신문). 한국 쪽이 미국쪽 보다 10%쯤 많았지만, 사실상 반반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조국을 버릴 수 없다는 심리적 저항을 생각한다면 그렇다.

그보다 1년 앞선 2002년 10월에도 비슷한 조사결과가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6개 대학생 1719명에게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해외에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귀국 않겠다”거나 “귀국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가 56.1%였다 한다(홍두승 교수. 서울대). 2중국적자도 최근 해마다 10%정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적이탈자의 88%가 남자라고 한다. 대부분 병역면제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족적 자긍심 없는 국제 전달들

이처럼 우리의 국민적 결집(結集)의식은 거의 해체위기의 상태라고 할 만큼 흔들리고 있다. 한해 60억 달러를 해외유학에 평평 쏟아 붓고, 불법 유출된 돈뭉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에 몰리는 것도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적 결집력은 민족적 자긍심을 반영한다.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자만이 세계적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민족적 자긍심 없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반영한다.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최근 2~3년 전부터 한국 골퍼들이 필리핀에 몰리면서 ‘어글리 코리언’의 추태에 대한 현지인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지난해 2월 필리핀의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일부 한국 골퍼들의 비행을 비난하면서 “필리핀인을 마치 하인처럼 부리려는 한국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다. 필리핀 사람들을 하인 부리듯 하는 한국인. 그들은 교양과 품위를 갖춘 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모르는 국제적 전달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이 있을 뿐, 명예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될 조국이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42만3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노말 핵산’이라는 유기용제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준 것은 지난 12일이었다.

타이노동자 하반신마비 부끄러워

타이 여성노동자 3명이 같은 증세로 앓다가 작년 12월11일 타이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 타이 여성 8명중 7명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연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것처럼 장갑과 얼굴보호장구 그리고 방독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하루 평균 15시간씩 일해 왔다고 한다. 필리핀의 골프장에서 필리핀사람들을 ‘하인’처럼 다루는 천박한 졸부의 나라 한국에서 타이 여성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짐승’처럼 부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만년전통의 문명국가로 문화민족임을 자부해온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짐승취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짐승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보고 느끼는 놀라움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거드름 피우며 가난한 이웃을 짓밟고, 동남아에 나가 골프를 치면서도 해외유학과 영어연수에 한해 60억 달러(2004년)를 퍼붓고, 억만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골프장과 빌딩과 호화저택을 사 모으는 얼빠진 민족의 모습이다.

오만한 거드름과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대주의가 우리의 두 개의 얼굴이다. 평생 고향을 잊지 않았던 천재 과학자 뉴턴과는 판판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반신마비라는 날벼락을 맞은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보면서 더욱 부끄럽고, 더욱 가슴이 아프다.

민주노동당 “서민생활 위해 1조 2천억 풀어야”

민주노동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주요정책을 밝혔다.

김혜경 대표는 "국민의 교육·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1조 2천억원 규모의 돈이 당장 풀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예산 중에서 관공서 운영비, 특수 활동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과 같은 난개발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4,800억원,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에 3,160억원, 경로연금 지원확대 2,16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39억원, 장애아 교육지원 537억원 등 추가 경정 예산 1조 2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 재원확보 방안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다하게 증액된 선심성 예산사업에서 1조 240억원을 삭감하고 굴포천 치수사업, 주한미군 분담금 등 민주노동당이 삭감을 요구한 예산에서 4천565억원, 새만금 사업 등 문제사업에서 1,530억원을 삭감하면 모두 1조 6천억원대의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대표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의 씹씹이가 줄어든 것이 바로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이라며 "향후 몇 년에 걸쳐 연간 100만명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정부와 경총이 19조원에서 2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실태가 훨씬 심각하기에 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비정규직 저임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기업, 기금 조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 등이 국채를 약정 구매, 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배는 가난한 사람끼리의 분배이며, 서민이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비정규직과 서민을 살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빈곤 해소를 위해 분배를 통한 성장정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조, 4대 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이 선진사회협약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수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방안은.

"양당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합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타협방식인 듯 하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사문제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문제가 많아 양대 노총이 철회를 주장했다. 집권중재나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관련 독소조항이 폐지되어야하고, 먼저 노사정위원회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

-당의 통일정책을 이야기해달라.

"조선사회민주노동당과의 정당교류를 통해서 통일의 기초를 앞당기고 구체화하겠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가 긴장돼, 여러 가지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북쪽에서 정상회담의 의향이 있다면 어디서에서도 회담할 수 있다고 본다.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교류와 대표단 만남을 추진하겠다."

-지난해 부유세를 제안했는데, 경제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매 선거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한 민생법안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올해 부유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9가지 법을 발의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만들어 빈곤과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보육문제, 아동의 아사 문제 등 현실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의 의료사각지대, 사회복지사각지대가 넓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많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단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

-추경예산과 관련해 다른 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문제는 대의에 있다. 지난 정기국회 때 민주노동당에서 다른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줄여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추경의 내용과 다르지만 정말 민생과 서민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명의 한계는 있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19조~26조의 추가예산이 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제발행을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압박과 국민 일반의 부담으로 귀결된 가능성이 높다.

주대환 정책위의장: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국가부채의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 국가부채비율의 규모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다."

이종석 정책연구원: "정부는 지난 IMF때 공적자금을 160조원을 조성한 바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9조원을 들이는 것은 IMF사태와 비교했을 때 큰 금액 아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미래경제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비정규 관련 제안할 것이 있는지.

"노동계와 생각이 거의 같다. 40만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이 600만이 넘고, 신용불량자만 300만이 넘는다. 이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40만명의 일자리 창출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공공기관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다른 당과 어떻게 협의해갈 것인가.

"법을 만드는 과정 중이었고, 양당에 이 문제를 제의한 적 없다. 하지만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주노동당의 원칙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파견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 법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켜 서민의 고통도 덜어야한다고 본다."



‘후대인터넷 선도국’의 조건

가정에서 누리는 초고속 인터넷을 시속 60km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됐다. 이로써 휴대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DMB에 이은 또 하나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와이브로'란 무선 광대역통신을 뜻하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Wireless Broadband)의 준말이다. 와이브로는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빠른 전송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다. 이동통신망 기반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무선랜의 장점을 합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 반경이 무선랜보다 10배 가량 넓고,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가정용 유선인터넷(ADSL)과 비슷한 1Mbps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휴대인터넷 시장의 전망과 내년 상용화를 앞둔 선정 업체들의 준비과정들을 전자신문과 매일경제뉴스를 통해 점검해 본다.

■ 인터넷 서비스 비교

구분	와이브로	유선 인터넷	무선랜	무선 인터넷
사용지역	옥내외	옥내	옥내·구내	옥내외(전국망)
인터넷속도	고속	초고속	초고속	중저속
이동시 사용	가능	불가능	저속이동시 가능	고속이동도 가능
이용 가격	상대적 저렴	상대적 저렴	저렴	높음
적용 기기	PDA, 노트북, 스마트폰 등	데스크톱, 노트북	PDA, 노트북	휴대폰, PDA

정부가 당초 2월 말로 예정됐던 사업자 선정을 한 달 이상 앞당긴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유무선 결합서비스인 휴대인터넷이 정체된 통신시장을 살릴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지난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서비스 기술 시현에 성공하는 등 오래 전부터 기술 개발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신규 투자가 부진한 통신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통신장비업체들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살리기에 일조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고 본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통신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동중에도 노트북PC나 PDA로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동전화, 방송까지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와이브로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인 코넷 기반의 올 IP(All IP)망을 갖추고 있고, 무선망 설계 툴과 TDD 중계기 기술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중 무선랜 서비스인 네스팟, 이동통신 연동, IPv6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자원 활용은 물론 신기술 개발 여력도 충분하다. 게다가 사업자들이 오는 2009년까지 투자하기로 계획한 3조원을 조기 집행할 작정이라고 한다. 또한 투자 효율화와 서비스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기지국 공용화와 공동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와이브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홈네트워킹,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IT 서비스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지국 장비를 비롯한 통신장비와 단말기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은 무선과 유선의 결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서 한국이 선두적인 위치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통신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 정부와 기업도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나 우리가 통신기술 강자 위치에 있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IT 강자로서 면모를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역할이다.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 관련 기업들의 채산성이 확보되고 산업 연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요 부진과 과당 경쟁 등으로 참여 기업이 이익을 내기 어렵고 경영이 악화된다면 그 서비스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위성 DMB의 경우 정책당국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TV 재전송 허가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와 이브로는 DMB와 마찬가지로 관련 단말기 보조금을 한시적이라도 허용해 초기 시장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통신기술이 1, 2년이 멀다 하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초기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유무선 전화에 초고속인터넷, DMB,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가 잇따라 출현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신비 지출 제약이 받고 이로 인해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

■유·무선 통합시장 주도권 노리는 KT

KT는 3개 사업자 중 가장 빠른 내년 4월부터 와이브로 상용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사업자 선정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KT는 2.3GHz 대역에서 서비스에 유리한 주파수를 우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온 KT는 연간 20% 이상 급성장하는 무선데이터 시장에서 와이브로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키우겠다고 선포했다. KT는 작년 2차례의 서비스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유·무선 통합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KT의 한 관계자는“우수한 주파수 대역과 KT가 보유한 광대역통합망(BcN백본망), KTF의 무선망 시설 등을 총 활용해 내년 4월 세계 최초의 고품격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T는 우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08년까지 전국 84개 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새로운 유·무선 통합환경을 고려해 이동통신, 무선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모드 복합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음성통신, 데이터전송, 영상 서비스 등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로와 SK텔레콤 연합전략 강화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은 KT·KTF에 맞서 유·무선 사업자 간의 연합전략을 펴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11월 SK텔레콤과 기지국 공용화 및 공동망(로밍) 사업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77개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눠 맡아 전송망을 구축한 뒤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주요 수입원이 될 대도시 지역에서는 치열한 상호경쟁이 불가피하다. 하나로텔레콤은 내년 1분기 내에 서울 강남 및 송파 지역에서 와이브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6월부터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하나로는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랜 결합서비스, 와이브로를 이용한 이동전화, 멀티미디어형 부가서비스 등을 개발해 사용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전략을 택했다.

오는 2010년까지 와이브로의 생산유발 효과가 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한 준비에 따라 잘 운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와이브로를 활성화하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콘텐츠 확보, 이동성 보장, 단말기 확보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저렴한 요금도 필요하지만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휴대이동성이라는 와이브로의 특성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산장비의 조기 상용화도 과제다. 세계 시장에 초점을 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장비를 개발하지 않고는 CDMA처럼 외국 장비업체의 배만 불러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만큼 사업자와 장비업체 간 윈윈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서비스 개발, 시장창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일관된 사업 추진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IMT2000의 경우처럼 힘들게 사업권을 확보하고도 EV DO와의 차별성 미흡, 투자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CDMA 종주국’이라는 명성에 이어 ‘휴대 인터넷 선도국’으로 불릴 날을 기대해 본다.



민주노총 제33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보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끝났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사회적 교섭’건은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로 폐회한 것이다. 민주노총 내에 사회적 교섭을 바라보는 극명한 입장차가 있다. 이 차이는 60만 조합원을 거느린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헤쳐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20일과 21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핵심 안건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과 ‘국고보조금 사용’ 건이었다. 그러나 13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을 순회하며 의견수렴을 했다. 또한 중집위, 중앙위원회의 등 의결기구를 거쳐 많은 토론도 진행했다. 유례없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대회에 와서도 중집위나 중앙위원회의와 똑 같은 양상을 보였다. 안건이 상정조차 안된 상태에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발언은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중앙위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대의원들은 이 지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중앙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보일 정도였다.

여기에 이수호 위원장의 미숙한 회의진행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회의가 지연될 것을 예견했으며 최악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것이라는 말이 회의기간 내내 유포되고 있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최대한 토론을 막지 않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사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회의를 지연시켰고 대의원들을 지치게 했다. 의장은 당연히 이를 제지시키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내의 고질적인 문제는 토론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13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토론해도 뛰어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NL과 PD라는 오래된 사상적 차이가 아니라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양측의 선부른 예견과 편견에서 비롯된다.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아 봐야 입만 아플 따름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대

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토론만이라도 진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사실 전 조합원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온라인 생방송)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어야 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대국민 여론을 의식했어야 한다. 끝으로 “더 깊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대의원의 문제제기도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었다.

운동하는 조직에 정치적 입장차는 당연히 존재한다. 또한 정파간 논쟁은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생명을 탄생시켜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정파간의 논쟁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전체 조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논쟁 때문에 대의기구가 민의를 저버려서는 더욱 안된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사회적 교섭과 국고보조금 사용 안전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장시간의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 임시대의원대회는 이번 대의원대회의 재판이 되지않길 간절히 바란다.

만

화

방

